

#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기·속도 등 시민 공감 우선”

광주시-시의회, 첫 간담회…로드맵 공유

전남도의회, 내일 의원 총회 후 입장 정리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절차가 본격화한 가운데 광주시와 시의회의 첫 간담회에서는 추진 배경과 기대 효과, 특별법안 등에 대한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

광주시는 6일 오전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시의원 간담회’를 갖고 추진 배경과 경과, 법적 근거, 향후 일정을 설명한 뒤 행정통합 추진 체계와 추진협의체, 행정구역 통합 방향, 특별법 구성안, 법정부 지원단, 여론조사 결과 등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일 ‘광주·전남 대통합 추진 공동선언문’이 발표된 후 처음으로 이뤄진 것으로, 23명의 의원 중 17명이 참석했고 광주시장과 양 부시장, 주요 실·국장이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시의원들은 행정통합 속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지난해 12월 29

일 전남의 행정통합 추진 입장이 나온 뒤 일주일 만에 행정통합 추진기획단까지 구성됐다는 것이다.

신수정 의원은 “시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행정통합에 대해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 현재 상황에서는 주민투표로 행정통합을 결정하기 어려워 의회 동의로 현안을 추진해야 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하다”고 물었다.

김용임 시의원은 “시민들은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한다”며 “통합을 했을 때 기대효과에 대해 논의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 시장은 “행정통합 시도는 이번이 4번째다”며 “각 시·도의 반대,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어서 동력을 잃었는데, 이번에는 다르다. 정부와 양 시·도 단체장의 의지가 하나로 이어진 만큼



6일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의원 간담회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이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심철의 의원은 “행정통합에 찬성한다는 전제로, 6·3 지방선거를 못 봐야 하고 급하게 통합을 추진하면 물리적 통합에서만

끝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행정통합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만 나오고 있는데, 부정적 영향은 없는지, 통합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강 시장은 “지방선거에 맞춰 추진하지 않으면 통합의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진다. 정부도 ‘5극 3특’ 정책으로 적극성을 보이는 만큼 지금이 적기다”며 “통합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시·도민들의 삶의 질 향

상보다 모두 하위 가치다”고 설명했다.

강수훈 의원은 “지난달 29일 전남이 행정통합 추진 입장이 나온 뒤 일주일 만에 공동 선언문 발표, 추진기획단 구성까지 이뤄졌다”며 “사전에 어떤 논의나 깊이 있는 토론, 실무선 또는 시장·지사 간 협의가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정다는 의원은 “행정통합을 통해 얻게 될 정부 지원이 특별법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며 “중앙정부와 협의가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대통령과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지난해 8월에 있었고, 이후 여러 변화와 흐름 속에서 지금의 추진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오는 8일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의원 총회를 열고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고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광주·전남 통합은 직접 시도민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보다 대의기관인 시도의회의 결의를 거쳐 행정통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의회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광주·전남 통합은 분권형 국가로 가는 초석”

신정훈, 특별법 통과 총력…서울 수준 자치 재정·권한 강조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6일 “광주·전남 대통합을 통해 분권형 국가로 가는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신정훈 의원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행안위원장으로서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을 신속 통과시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광주·전남이 통합은 수도권 1극

체제를 허파하고 ‘5극 3특’ 국가전략을 실제로 뒷받침하는 대한민국 핵심 성장 축을 새롭게 구축하는 일”이라며 “광주·전남 통합을 오랫동안 주장해온 만큼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통합만 이룰 수 있다면 정치적·유·불리는 따지지 않고 주어진 소임을 다하겠다”며 “이제 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공



이 국회로 넘어온 만큼 통합 입법 제정 소관 상임위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 광주·전남 통합이 정부의 의지와 지역의 염원을 제대로 담아내도록, 국가전략과 지역 미래에 부합하는 법·제도 설계에 모든 책임을 지고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광주·전남 통합이 단순한 행정통합이 아닌 분권 국가의 특별자치정부

라는 방향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법 제정 단계에서부터 서울 특별시에 준하는 자치 재정과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면서 “통합 과정에서 특별자치정부의 재정이 줄어들지 않도록 부칙 등을 제정해 물밑 틀 없이 지키겠다”고 말했다.

또한 “특별법 국회 예정 시한이 다음달 28일이며, 주어진 시간은 약 40일이다”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장으로 광주·전남, 서부권, 동부권 등 최소한 권역별 속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이를 기반으로 시·도의회의 의결 등 주민동의 시간을 갖겠다”고 설명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

## “여성이 앞장…대전환·대도약의 미래로”

전남여성단체들, ‘광주·전남 행정통합’ 지지 성명서 발표

전남여성단체협의회와 전남여성정책포럼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해 찬성과 지지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6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지난 2

일 발표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공동선언문’을 환영한다”며 “광주·전남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역사적 결단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광주와 전남은 하나의 생활권이자 공동운명체로, AI·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광주·전남이 대한민국의 미래 핵심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막대한 비전이 제시됐다”며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국가의 행정·재정 권한의 실질적 이양과 지역 맞춤형 특례 확보를 통해 지역 성장동력과 도민 삶의 질을 함께 높여겠다는 방향성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모범 사례

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여성단체들은 이어 “앞으로 광주·전남 대통합이 도민의 공감과 참여 속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며 “대통합이 대전환과 대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성들이 책임있는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 성현출, 광주 남구청장 출마 공식 선언

“미래 산업 유치로 남구 경제 엔진 재가동”

성현출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남구 수석부회장(사진)이 6일 광주 남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성 수석부회장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미래 산업 유치로 남구 경제 엔진을 재가동하겠다”며 “‘사람 중심 남구발전’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정채원 남구의 재도약을 위해 ‘실행력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출마표를 던졌다.

성 수석부회장은 “현재 남구는 생활 인프라와 경제와 산업 기반 약화, 상권 쇠퇴로 인해 청년들이 떠나는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제는 구호가 아닌 예산과 정책 설계로 증명하는 ‘사람 중심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수석부회장은 남구 발전을 위한 핵심 비전으로 ‘미래 산업 유치’를 제시했다.



그는 “세계적인 미래 산업 유치 경쟁 속에서 남구에 적합한 신산업을 선별해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생활 밀착형 행정을 통한 주민 삶의 변화를 시킬 것도 강조했다.

성 수석부회장은 “현상을 유지하는 안일한 행정으로는 남구의 미래를 지킬 수 없다”며 “남구를 사람이 살고 싶고 미래가 이어지는 도시로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아직 사고가 나지 않았다 해서 과연 앞으로도 안전할까요?  
더 이상 운에 맡기지 말고 이젠 시스템으로 지키세요!

"바이셀프는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전 산업 디지털 안전관리 플랫폼입니다."

7대 핵심요소 기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산업·규모 특성별  
최적화된 맞춤형 이행



근로자는 위험 불안 해소,  
대표자는 중처법 대응 완료!

2025 한정 프로모션 최대 60만원 혜택! 연간이용권 가입 시 최대 100만원 혜택!



프로모션 및 도입 문의 062-971-1775

중대재해처벌법, 아직 대비하지 못하셨다면?

네이버에 바이셀프를 검색하세요.

